

기독교 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 할 것인가? “기독교 학문과 정책개발 ”

장헌일 원장/ 행정학박사
생명나무교회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

I. 서론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신학과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교계의 위기가 지극히 개별화되고 사유화되어 버린 개교회주의 현상을 신학과 신앙의 공적 패러다임 회복을 통해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갈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신앙의 개인주의화로 교회가 공공성에 입각한 공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축소되고 교회의 공교회성을 상실한 결과 각 성도의 개인적 관심과 이익 그리고 축복으로 함몰되는 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와 성장지향주의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적 성숙분리, 번영복음에 입각한 기복주의 신앙 등에 물든 건강치 못한 교회론 때문에 강단 설교는 불균형과 왜곡된 해석으로 선포되며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신학에 기반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독교 학문이 어떻게 사회와 교회에 봉사 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기독교 학문이 국가 정책 개발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는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 먼저 공공신학의 주요 명제들을 통해 대안을 찾는 일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

II. 본론

1. 기독교 학문과 공공신학

기독교 학문 토대 위에 성경적 세계관을 담보하는 공공신학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져야 하기에 공공신학이란 무엇이며, 왜 공공신학을 해야 하는가?로부터 논의를 출발하려고 한다. 다만 본고의 주제에 맞추어 공공신학에 대한 깊은 해석보다는 공공신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기독교 학문이 어떻게 공공정책에 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신학의 기원은 1960년대 벨라(Robert N. Bellah)에 의해 시작된 '시민종교'(Civil Religion)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벨라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시민종교는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나란히 존재하는데, 이는 미국 대중들의 경험들을 통해 가시화되었고, 미국의 제도와 조직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미국적 삶’이라 불리는 전체 구성체에 종교적인 차원을 제공해 주었다. 그럼으로 미국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기독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신념체계와 상징, 의례를 드러낸다(Robert N. Bellah, 1967).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신학자, 스타크하우스(Max Stachhuose)는 이 공공신학을 넓은 의미로서 정의한다. 그는 신학이 ‘공적’(public)이라고 불릴 수 있는 두 가지의 근거에 대해서 말한다.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와 같이 우리는 비밀스런 집단이 아니며, 어떤 특권층도 아니고, 비합리적이지도 않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고 필요한 존재라고 믿는다. 우리는 힌두교도 및 불교도들과, 유대교인 및 회교도들과, 인문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과 합리적인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신학은 공적인 삶의 구조와 정책으로 인도될 것이다. 공공신학은 본성적으로 윤리적이기 때문이다.”(노영상, 2007)

이와 같은 시민종교의 한 형식으로 마틴 마티(Martin Marty)는 1974년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eibuhr)의 신학을 연구한 논문에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소개했고, 몇 년 후에 ‘공적교회’(public 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미국의 공적인 삶 속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냈다. 마티와 니버의 뒤를 이어 등장한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은 공공신학의 모델을 제시한 공적 신학자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신앙 전통, 그리고 성서와 역사와 철학적인 관점에 따라 미국 대중들에게 행동의 지침들을 제공해 주었다. (최경환, 2014)

하지만 최근 한국교회의 공교회성과 공공성에 관한 인식 부족과 실천적 삶에서 적용되지 않아 교회 또는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평가는 낮은 현실이다. 실제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에 관한 국회의원 인식조사(2015. 9. 21. 연동교회 발표)’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1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크리스천 국회의원은 70명, 불교 21명, 천주교 29명, 기타종교 2명, 종교 없음 25명, 무응답 1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가지 조사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기독교가 한국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부분에서 ‘비교적 크게 기여하였다’ 59.3%와 ‘크게 기여하였다’ 14.5%, 총 73.8%가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부분에서는 70.8%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호감이 높은 종교는 천주교로 58% 이어 불교 56.8%, 기독교 43.2%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호감도는 삼대종단 중 가장 낮다. 국회의원들도 천주교, 불교와는 친해지려 노력하지만, 근래 여러 문제점과 비리가 난무하는 기독교는 멀리하고 있다. 정치 속성상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 영성과 전문성(시78:72)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해 공교회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하겠다. 이제 한국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대국가와 대정부를 향한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공신학 즉 공공신앙의 공동체 리더십을 실천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 학문이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개발(政策開發, policy development)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적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정책개발이란 정책문제와 목표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모형을 개발한 다음 각 대안들의 비용·편익 및 효과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실행가능성·대표성·논리성 등을 향상시키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접근하는 정책개발은 다루는 범위가 정책분석보다 더 포괄적이며, 정책분석·정책형성·정책평가를 포함한 총체적 내용이기때문에 정책개발 관점에서의 적용 혹은 적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성경적세계관과 가치관에 입각하여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사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 복지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공공정책과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공공정책으로 통일과 환경정책측면에서 북한 나무심기 생태환경운동을 비롯한 북한인권법 제정, 주일 국가고시 폐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공공정책 개발과 적용에 대해 기독교 학문을 토대로 실제 정책에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기독교 학문과 정책개발 사례

1) 저출산 대응 영유아 복지를 위한 교회시설 활용방안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150조원을 쏟아 부으며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출산율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청년취업, 보육 및 교육비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발생하는 문제이며, 가장 큰 해결 고리는 청년취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특정 정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인구정책 시차가 20년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몇 년이 ‘인구정책의 골든타임’ 이므로 지금이야말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시대 영유아 복지를 위해 한국교회가 국가복지정책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답해야 한다. 최근 보육수요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급증한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감소되어 왔다. 1993년 전체 어린이집의 15.2%이던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2012년도에 5.2%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의 감소는 “보육 시설의 공공기반 붕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시설 즉 건물을 중심으로 시설이나 인적자원, 재정, 조직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을 이용하여 영유아복지사업을 실천해가며 특히 신뢰받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각 종교기관 시설을 활용한 영유아복지시설 확대가 가장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1)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종교시설 내 어린이집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의 배치기준에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시설을 활용하면 전국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영유아 보육정책에 협조할 수 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전국 현황을 보면 서울 750개소, 부산 152개소, 대구 39개소, 인천 125개소, 광주 31개소, 대전 28개소, 울산 32개소, 세종시 5개소, 경기 546개소, 강원 83개소, 충북 56개소, 충남 65개소, 전북 54개소, 전남 80개소, 경북 132개소, 경남 133개소, 제주 21개소 등이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출산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종교시설을 활용한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이다. 2014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출산장려지원제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05곳을 신설하기로 결정 되었다. 또한 연 평균 150개씩 늘려 2017년까지 600곳을 확충한다고 한다. 전체 보육 아동 중 직장,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작년 26%에서 2017년에 3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종교시설 활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종교시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 내 보육 거점역할

국공립 어린이집을 양적 확대와 함께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를 위한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단순히 아이를 맡아주는 '탁아' 기능을 넘어 가족지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을 함께 하는 이른바 '육아지원 원스톱 센터'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종교시설을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삼아, 부모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보육 참여를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육정책은 결국 가족친화적인 노동시장과 함께 맞물려 추진되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과 직장 문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 다. 국공립 어린이집 한 곳을 새로 짓는 데 평균 10억원(전국 기준) 안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문제에 가로막혀 논의는 번번이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을 새로 지으려면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96곳을 새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대신 교회 등 종교단체 시설을 무상임대하거나 기부채납 받는 '민-관 연대'와 주민센터·문화회관 등 공공기관에 의무설치하는 방안 등을 통해 평균 소요 비용은 신축 비용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마포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분양받은 종교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세운 교회 어린이

이집이 전국에서 최초로 오늘 2013년 6월 14일 개원식을 가졌다.

서울 상암동 하늘빛교회는 올해 초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는 준공 10년 이내에도 종교용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의 유권해석을 받고 어린이집 문을 열었다. 하늘빛교회는 구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교회 1층 공간을 마포구에 무상으로 임대하며, 현재 만 1세에서 4세 아동 45명에서 정원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성북구는 2013.11.06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위해 종교단체와 MOU 체결하고 201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12곳 개원 예정, 총 43개소 확충하였다.

성북구가 시행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은 민간에서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10~20년간 무상으로 빌리고 구가 어린이집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소 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으며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 영등포구는 관내 종교시설인 '영은교회'와 협약을 맺고 민·관 공동연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영은교회가 설립하는 지상 8층의 건물 중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하였다. 교회 소유의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덜하다. 실제로 구는 리모델링 1억 원과 각종 기자재 등 설치비 1억 원 등 총 2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 교회 측은 구로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운영권을 부여받고 시설 기자재비와 운영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구립 영은어린이집은 약 290㎡ 규모에 보육실, 유희실, 교구실 및 원장실, 조리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수용인원은 0~3세 사이의 영유아 65명이다. 2015년 8월에 완공돼 9월부터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다.

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국가정책적 제언

(1) 국회, 학계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관하고 CTS기독교TV가 주최한 '저출산 시대, 한국교회는?' 심포지엄이 2015년 6월 17일 오후 CTS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박종화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저출산 및 영유아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해법과 교계의 역할에 대해 주제·사례발표를 한 다음 토론을 벌였다.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국 지역 순회 세미나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관하고 CTS기독교TV가 주최하여 2015년 11월 3일 부산 고신대학교 손양원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장현일 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정 목사(광양대광교회), 김선희 교수(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 김희영 사무국장(광양대광교회), 김향은 교수(고신대학교) 등 저출산 및 영유아 교육 관련 권위자 및 목회자, 선교사, 대학생 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과 기독교계와 교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주제 및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참여 방안(교회 사례)

광양 대광교회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역점 사업은 영유아와 엄마들을 위한 사역이다. 임신부학교(임신여성), 아장아장학교(12개월~20개월 영아와 부모 참여수업), 엄마랑아기학교(20개월~36개월 영아와 부모 참여수업), 아가방(시간제 탁아돌봄사역), 대광어린이집(36개월~7세 아동), 꿈샘지역아동센터(초등학교 1학년~6학년 방과후 학교), 무지개교실(주말 아동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센터(다문화임산부학교, 다문화 자녀돌봄)등 여성 및 영유아, 아동들을 돌보는 사역을 다양하게 펼쳐오고 있다.

또한 과천소망교회는 8년전에 과천시와 연계하여 사회복지 전문 사역기구로서 사회복지법인 큰소망을 설립하여 현재 과천시노인복지관과 큰소망경로의원, 큰소망주간보호센터, 큰소망장기요양센터, 꿈나눔과천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3) 북한통일화합나무심기를 위한 한국교회 통일공공정책 KGPM법인화

한국교회가 국가의 통일정책의 경직성과 정치상황에 따른 불연속성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북음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교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상호 공동 관심사이며 소통 할 수 있는 매개체는 남북한 나무심기이며 이는 환경 생태기 회복과 가장 효율적인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공공정책이며 푸르고 푸른 한반도를 후손에게 물려주며 북음통일의 가장 기초적인 성경적 통일지원정책이다.

북한 산림면적의 감소는 한반도 전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의 약화를 의미하며, 하나로 연결된 남북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긴장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곧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한반도는 남과 북,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 모두의 것이며 산림의 회복은 생명의 회복이요, 삶의 회복이요, 한민족의 회복이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범교단적으로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통일화합나무로 녹색한반도를 만들자”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국민이 녹색한반도를 꿈꾸며 통일의 그날까지 한반도 전역에 통일과 화합의 8천만그루의 나무를 심고자 한다. 그 염원과 의지를 모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녹색한반도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KGPM)를 통해 다음과 같이 비전을 선언하였다.

첫째, 한반도는 환경 공동체로서 하나이다. 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는 녹색한반도 통일화합나무 8천만그루 나무심기 범국민운동본부는 녹색 생명과 평화를 고양시키는 희망과 사랑의 한반도 그린프로젝트이며 북한에는 푸른숲과 농작물 조성을 위한 혼농임업을, 우리는 한반도 환경생태계보존과 탄소배출권이 주어지는 남북 상생의 경제협업 등 민생협력 프로젝트의 출발이 될 것이다. 이 운동은 남북대립을 극복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귀중한 씨앗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 녹색한반도 프로젝트가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시키고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식량 및 에너지 지원과 농축산 등 민생개발협력과 잘 연계하여 주민의 삶 개선에 힘써야 한다.

특히 녹색한반도를 푸르게 가꾸기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과 모든 국민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1인 2그루 나무를 3년 연속사업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통일화합나무123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이 한반도 우리 겨레의 생명자원이 되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씨앗이 되어 화해와 평화의 기초를 세우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평화 통일을 향한 통일화합나무심기 범국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에 한국교회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교회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된 녹색한반도 통일화합나무 8천만그루심기 범국민운동 국회심포지엄(2014년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과 두만강 평화통일화합나무심기 발대식(함경북도 나선시 원정, 조산리 등)통해 10 만그루 식수운동(2015년 5월 25~28일)을 실시하였다.

특히 한국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으로 공공성 확대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위해 사단법인 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회(KGPM)는 대북지원단체 지정 승인(2015년 7월 30일)을 통일부로부터 받아 한국교회가 대국민, 대국가 공공정책에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기독교공공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1) 한국교회와 정계·학계 북한나무심기 통일정책 실천 국회 심포지엄 개최

한국교회 주요 11개 교단장이 주축인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교회 싱크탱크인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관한 “녹색한반도 통일화합나무 7천만그루심기 범국민운동 국회 심포지엄”이 2014년 8월 19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나무심기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한민국 국회, 국회조찬기도회, 아시아녹화기구가 후원한 심포지엄에 참석자 모두 제6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적 소명으로 남북 산림협력사업인 통일화합나무 7천만그루심기 범국민운동을 통해 상호신뢰와 화합으로 녹색한반도를 이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는 시간이었다.

(2) (사)한국교회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회(KPGM) 창립총회 개최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주최·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관 녹색한반도 통일화합나무 8천만그루심기 범국민운동 및 (사)한국교회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회 창립총회가 2014년 9월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북한나무심기 국내외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립총회는 한국교회 주요 11개 교단장이 주축인 한

국교회교단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교회 싱크탱크인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아시아녹화기구·동북아산림포럼이 후원으로 열렸다.

(3) '통일화합나무 8000만 그루 심기' 비전선포

(사)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는 2015년 7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인설립 감사예배 및 통일화합나무 8000만 그루 심기 범국민운동 비전선포식'을 갖고 북한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했다. 주된 사업은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고 주민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전문가 단체를 구성 중이며 양묘와 조림, 연료·식량 공급 등 녹색한반도를 위한 체계적 산림 프로젝트를 가동 중에 있다. 또 지속적인 산림복구를 위해 산림 관련 법령의 개정과 '북한 산림복구 및 농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전국 시·도 기독교연합기관과 교회들이 참여해 1인 2그루 나무 심기를 3년 연속으로 하는 '통일화합나무심기 123모금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한반도녹색평화통일기도회'를 잇달아 개최할 것이다.

(4) 통일화합나무심기 북한 현장 발대식

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KGPM)와 원그린코리아무브먼트(OGKM) 임원들, 북한 주민들이 2015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함경북도 나선시에 있는 청학묘목장에서 통일화합나무심기 발대식을 갖고 식수를 마쳤다. 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는 최근 북한을 방문해 함경북도 두만강 인근 지역에서 '광복(분단) 70주년, 통일화합나무 8000만 그루 심기 발대식'을 가졌다.

4) 주일 국가고시(시험) 폐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6년부터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와 변리사, 관세사 등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2015년 시범 운영됐던 토요일 시험 시행이 주5일 근무제도와 주5일 수업이 정착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수험생들의 요청을 반영해 2016년부터 시행하는 모든 자격시험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회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 등 교계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발표 후 환영의 뜻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일시험 변경이었고, 박근혜 대통령후보도 이를 약속했다. 지금은 주5일제 정착으로 토요일에 학교 교실을 수험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요일 시험을 평일로 전환한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국민행복 추구 차원에서 평일로 변

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가 공무원시험은 10여 년 전부터 평일로 변경해서 치러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37개 국가자격시험을 토요일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업체 시험도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

5) 북한인권법 제정

지난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는 기나긴 진통을 겪어왔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집권 이후 급격히 악화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이 법안 자체가 대북재제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물리면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종료를 3개월여 앞두고 북한인권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배경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잇따른 북한이 도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법안 합의를 두고 벌어지는 내부의 긴장상태가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어 미국이 2004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자 2005년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이 발의됐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목적을 두는 동시에 북한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위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일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한인권재단 등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북한이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를 사실상 '체제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추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그동안 핵과 인권, 이 두 가지를 통해 자신들의 체제를 고립, 압살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 개선을 내세워 결국은 북한을 고립, 체제 붕괴를 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6) 종교평화법 문제와 입법 저지운동 필요성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차별실태조사' 용역을 불교기관인 종자연에게 맡긴 것과 관련해 보수 기독교계는 물론 진보 기독교 단체인 NCKK까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유력한 대선 후보 주자인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고문이 '종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큰 우려를 낳았다. '종교평화법'이나 '종교차별금지법' 등은 겉으로 보기에 종교 간의 평화의 가치를 담은 좋은 법 같아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나 기존 전통 종교를 지킨다는 미명아래 기독교의 선교와 전도활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평화법'이나 '종교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개신교의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사회적으로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면 전도와 포교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제재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션스쿨이나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기관들이 개인의사에 반하는 종교활동을 일체할 수 없게 돼 선교와 전도의 위협이 가장 크다.

7)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조직 국가기도회와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1) 세월호 참사 희생자유가족 위로 한국교회지도자연합 금식기도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는 2014년 5월 12일 긴급 기자회견(종로 100주년 기념관)을 갖고 2014년 5월 21일 오전 1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위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지도자연합 금식기도회를 드렸다. 이날 기도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로마서 12장 15절) 주제로 교단장을 포함 각교단 노회장 감리사 장로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임원과 시도기독교연합회장 등 한국교회지도자 1,000여명이 연합하여 회개하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과 공활을 바라는 금식기도회로 드려졌다. 전용재 기감감독회장의 인도로 드려진 금식기도회에서 설교자로 나선 김동엽 예장 통합 총회장은 ‘여호와께 돌아오라’의 제목으로 박종근 한국장로연합회 대표회장이 봉독한 이사야 55장6~7절, 요한일서 1장5~10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김대현 기침 총회장은 대표기도와 이번 세월호 참사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안산제일교회 담임이며 시인인 고훈 목사가 “애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위로의 시를 낭독하자 많은 참석자들은 숙연하고 한편 많은 참석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일래 기성 총회장은 위로 메세지와 최순영 예장 대신 총회장이 낭독한 한국교회 결의문을 통해 첫째,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에 치우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은 “나부터 바로 살겠습니다”고 다짐했다. 둘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과 ‘유병언특별법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셋째, 국회와 정부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생명의 위협, 재산의 착취, 가정파괴 그리고 협박과 폭력을 일삼고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비·이단의 불법성과 반사회성을 철저히 규제할 수 있는 사이비이단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넷째, 개교회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을 회복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나가며 세월호 실종자 모두가 끝까지 가족 품에 돌아오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희생자 유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은 “5월25일부터 31일까지 애도 주간을 선포하며 25일 공동기도문과 공동설교문은 통해 한국교회가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철저한 세월호 진상규명과 구원과 등 사이비이단 척결을 위해 오늘 현장

에서부터 유병언특별법과 사이버이단규제법 제정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바른사회 건강한 대한민국 대 개조 법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도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장을 비롯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하여 경청하며 기도했다. 금식기도회는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자 CTS기독교TV와 CBS 기독교방송 등을 통해 방영되었다.

(2)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제정 촉구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주요교단장들은 2014년 7월 26일 오전9시 서울 종로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한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회의에 참석한 교단장들은 전용재 감독회장(기감), 이신웅 총회장(기성), 고충진 부총회장(기하성), 김동엽 총회장(예장통합), 안명환 총회장(예장합동), 이종복 총회장(예성), 원종문 증경총회장(예장 피어선) 등이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후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가족대책위 단식농성천막을 방문하여 단식 13일째인 3인 대표(5명 단식시작 2명은 병원이송) 중 김영오씨(유민이 아빠)와 세월호 대책위원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는 세월호대책위와의 의견수렴과 협력을 위한 창구를 장현일 사무총장(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이 맡기로 하고 한국교회가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이하 교단장협) 소속 교단장들은 2014년 7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는 안명환 총회장(예장합동), 이신웅 총회장(기성), 전용재 감독회장(기감) 등과 장현일 교단장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최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 국민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기독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고견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교단장협은 이날 장현일 사무총장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측에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청와대에도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일부 선동가들에 의해 집단행동을 하는 등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쟁의 산물로 삼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세월호특별법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세월호 문제를 매듭짓고 생명존중과 안전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해 온 국민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야정치지도자들의 결단

을 촉구했다.

(3)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 땅의 신학자들 중심 기독교 학문과 세월호 가족 고난 동참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땅의 신학자들은 청운동주민센터 앞과 광화문광장에서 기도회를 하고, 177인 성명서를 냈다. '고난은 연단'이라는 전통 신학 붕괴...<결에 머물다>, 새로운 신학적 담론 형성했다.

세월호 참사 2년을 맞으면서 한국교회 안에 '세월호 신학'이 형성되고 있다. '공공성과 사회적 구원' '우는 자와 함께 우는 하나님' '부활·영광의 하나님'이 특징이다. 이른바 '신정론(神正論)'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통에 직접 뛰어드는 하나님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신정론에서는 악과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곤 한다.

2016년 4월 31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교회를 돌아본다' 신학 강좌는 신정론 신학을 반성하는 자리였다.

세월호 신학 담론은 또 사회·정치 영역에 무관심했던 기독교 신앙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신앙의 공공성 측면이 부족했다. 개인 영성에 치중한 나머지 세월호 참사 앞에서는 무기력했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아공의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발의한 벨하신앙고백서는 인종차별 정책을 진리가 위협받는 상태이자 이단이라고까지 천명했으며,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견해는 신앙 색깔의 차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 문제와 직결된다.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짊어지신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고통의) 현실을 극복하고 당신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의지를 보여주셨다.

8) 불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종교편향과 왜곡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제20대 4.13총선 예비후보자 중, 기독교관련 예비후보자 10명(새누리당 7명/ 더민주당 3명)을 낙선대상 후보자로 지목하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에 낙선대상 후보자의 공천심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종자연이 밝힌 낙선 이유는 '정교분리, 종교중립 위반' 이라는 그럴듯한 궤변이다. 종자연은 법적 근거로 <헌법 제 20조 1항>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20조 2항>의 '국교 불인정과 종·정 분리',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1항>의 "공무원 직무수행의 종교차별 금지"와 <동법 제59조의 2항>의 '공무원의 소속 상관 종교차별 행위에 대한 불복종 권리' 를 들고 있는 모양이다.

또한 종자연은 공천배제 요청 이유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자로서 특정종교를 위해 발언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다."며 "낙선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종자연의 금번 공천배제, 낙선운동은 기독교 공직자들에 대한 심각한 종교편향적 공격행위이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 유린 행위이다. 낙선대상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 관련 발언자들이다. 공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연히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 법률용어사전에서 “종교의 자유를 ”종교의 선택 · 변경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종교적 사상발표의 자유, 예배집회의 자유, 종교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는 그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 실행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

공직자가 자기가 믿는 종교단체 행사에서 신앙적 표현을 하는 것은 헌법 제20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으로서의 개인권리이고, 자유다. 종자연이 말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1항>의 “공무원 직무수행의 종교차별 금지”와 <동법 제59조의 2항>의 ‘공무원의 소속 상관 종교차별 행위에 대한 불복종 권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수행이 아닌 개인 신앙활동까지 공직자라고 해서 종교편향의 울가미를 씌우려 한다면 이는 헌법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종자연의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폭거이다. 그 누구도 불교단체 종자연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에 대한 종교편향 심판권을 주지 않았다. 더구나 종교편향을 들먹이면서 기독교 공직자들에게 집중 공격을 가하는 종자연은 불교단체로서 종교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다종교사회에서 상대 종교인들의 신행(信行)마저 깎아 보려는 종자연은 종교간 분쟁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나쁜 단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13총선 예비후보자 종교편향을 들먹이면서 왜 종자연은 불교신자들이나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예비후보자들의 과거 발언들은 문제 삼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번 국민일보가 발표한 친 불교관련 공개발언 예비후보자들만 해도 7명이나 된다. 그들은 불자라고 해서 묵인하면서, 기독교 공직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불교단체 종자연의 비뚤어진 잣대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을 다치게 할 것이다.

종자연은 2015년 12월, 기독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행하는 신앙적 감사표현이 풀사나워서 각 방송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를 제지하려 들었다. 또 예전에 불교단체들은 운동선수들이 시상식에서 감격에 젖어 행하는 신앙적 감사표현 마저도 저지하기 위해 물의를 일으켰다. 좋은 일이 있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건 신앙인의 본연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건 종교편향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종교의 신념과 가치관에 의해 발언하는 공직자들의 개인적 신행을 시비건 적이 없다. 공직자라 해도 신앙공동체 안에서 자기 신앙의 표현은 고결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종자연은 이제라도 공직자들의 종교자유를 유린하려는 폭거를 중단하고, 공개한 예비후보자 열 분들과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에도 공개 사과를 하기 바란다. 다종교 사회에서 굽어진 잣대를 들이대며 함부로 종교편향의 칼날을 휘두르는 건, 종교분쟁을 유발하고, 국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반역적 행위이다.

종자원이 불교단체로서 대자대비의 정체성을 지키며 타 종교와도 조화로운 화목과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불교가 지원하는 소위 불교 썬크탱크 종자원은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 종교편향적인 사고를 버리고 다종교사회에서 최소한 종교 간의 도의를 지키는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이에 대한 교계의 각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공공정책에 따른 실천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썬크탱크 설립이 시급하다 하겠다.

9)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4년4월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회가 범교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취합에 나선다.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대표회장 신신목, 상임대표 권태진 목사)’ 관계자는 2014년 3월 26일 “5인 정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겸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공청회에는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세무사, 회계사 등도 참석토록 해서 교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대책위원회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단 결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 시국대책위의 권태진 박종언 목사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장현일 장로, 신용주 세무사 등은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군포제일교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김낙희 세제실장과 김경희 소득세제과장, 전성익 사무관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교계 인사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무리한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교계가 당사자인 만큼 교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교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교계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갈려 있는데도 찬성 측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부과하는 방안, 종교인소득세 신설방안, 근로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 등 여러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해 과세한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이어지자 소득세법을 개정,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측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대로 과세할 경우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종교단체에 대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는데, 이는 세무조사 등 정부가 교계를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서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행법으로도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 반대의 근거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와 정부가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정부는 다시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고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등 '종교인 과세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계 내부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해 정부의 새로운 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헌일 원장)이 공청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7일 종교인 과세를 반대해 온 교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교인 과세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교계는 여전히 과세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기독교 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헌일 원장)은 2014년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시도했지만, 교계 내 서로 다른 입장차만 확인했다.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을 보인 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 김재성 소장은 “시대가 한국교회에 대해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목소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종교인 과세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성 소장은 또, 정부가 기존에 종교인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방침에서 변경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종교인 과세 여부는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세무법인 조이의 신용주 세무사는 "종교인이 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을경우 세무 사찰의 근거가 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종교인을 일시적 소득을 얻는 기타소득자로 보고 종교인 소득을 신설한 것도 소득세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가 국가를 대신해 종교인 과세에 의한 세수 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외 이웃들에게 지출해왔기때문에 목회자들이 세금을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성총회 조일래 총회장은 “목회자는 일반인들과 달리 세금보다 더 많은 부분을 교회와 사회, 나라를 위해 드리고 있다”며, “목회자를 세금을 안내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과세 대신 교회가 그 일을 더 잘해달라고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청회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차이 커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이번 공청회 내용을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종교인 과세 수정안을 낸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국가 공공정책에 관해 교회와 학계 등 각자의 분리된 목소리만 있었다. 특히 기독교 학계는 각 영역별 학문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지만 그 연구와 정책적 제안을 실제로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가와 우리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학문적 사후약방문식으로 공공의 문제가 발생할 때 급조한 심포지엄과 세미나는 있지만 이후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에는 미흡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공정책의 특정 영역에 관해 연구자 개별적 접근의 한계로는 정책 반영 확률이 더욱 낮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관해 학제적 접근과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공공정책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교단 교과를 초월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변환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한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혁 시켜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 그리고 사랑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 기독교 학문이 정책결정에 선한 영향력을 갖도록 커뮤니케이션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중요하다.

기독교학문이 사회와 교회에 공공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봉사하기 위해서 기독교학문을 통한 국가, 교회에 공공정책 필요성을 한국교회에 설명하고 (가칭)한국기독교정책연구원 혹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기독교정책연구소를 설립할것을 제안하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공공정책을 제시하고 정책입안부터 집행 그리고 감사까지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썩크 탱크 설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참고문헌>

노영상,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공공신학의 이해와 수용에 대하여, 북코리아, 2007. 66-67
최경환, 공공신학의 기원과 특징, 최근 이슈들,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2014년 11월 22일
Robert N.Bella, "Civil Religion in America," Doedalus 96 no.1(Winter 1967)3-4

<언론보도자료>

통일화합나무심기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0908>

<http://news.joins.com/article/15583816>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4950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45135&code=23111111&cp=nv>

저출산 <http://timesisa.com/news/view.html?section=93&category=94&no=12883>

<http://cupnews.kr/news/view.php?no=3861>

<http://timesisa.com/news/view.html?section=112&category=114&no=12408>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86879/20151104/인구정책의-골든타임-실효성-있는-정책-절실.ht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014024&code=61221518&cp=nv>

종교평화법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73758/20140720/긴급제언-불교계의-종교평화법-제정-촉구에-대하여.htm>

세월호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71940/20140507/장헌일-칼럼-세월호-침몰-사건-한국교회의-책임과-역할.ht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ynsis&logNo=220079296621>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0189>

종교인과세 <http://www.nocutnews.co.kr/news/400568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226457&code=61221111>

통일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264>

종자연 <http://blog.naver.com/gocch?Redirect=Log&logNo=140205382802>

국회의원인식도조사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58291/20120921/낙태-반대-75-동성결혼-반대-64-해외선교-긍정적-53.htm>

<정책제안서>

저출산시대 극복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

(시사타임즈 2015년 12월 4일)

장헌일 원장/행정학 박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

우리나라 출산율은 올해 추정치 기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팩트북이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24개국 중 219위를 기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 저출산·고령사회의 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고음이 울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997년부터 출산율이 1.45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국에 진입했고, 결국 2001년에 1.3명 밑으로 내려간 이후 13년째 1.3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 이어 내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란 말이 등장하더니 ‘꿈’과 ‘희망’까지 놓아버린 ‘7포세대’까지 이른 현 세대를 반영하는 슬픈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중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저출산, 출산기피 현상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고, 심지어 결혼 이후에도 육아비용 부담과 자녀의 교육문제 등의 이유로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출산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언합니다.

먼저 종교시설을 활용한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입니다. 2014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출산장려지원제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05곳을 신설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연 평균 150개씩 늘려 2017년까지 600곳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전체 보육 아동 중 직장,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작년 26%에서 2017년에 30%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종교시설 활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 차원의 접근 방법을 통한 비영리적 운영모델이 필요합니다. 최근 찾아지고 있는 보육사고 발생으로 낮은 위탁 신뢰도를 극복하여, 양질의 보육을 위해 책임과 헌신, 그리고 종교적 사명감으로 높은 위탁신뢰도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적 운영 접근으로 육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교회가 위탁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회 내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양질의 어린이집 개설 증대가 가능하고 우수한 보육환경과 낮은 보육료로 양질의 어린이집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 개설 지원과 같은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설지원이 요구됩니다.

1층 시설만 인허가 가능한 현행 제도에 대해 안전을 갖춘 다면 2층도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국내 입양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012년 8월, 입양가족 허가제로 변경되며 입양신청수는 23% 감소했습니다. 입양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혼혈·연장아동은 국내입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입양가정, 장애·혼혈·연장아동입양, 절차의 복잡함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다문화, 장애인 등이 연계된 사회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지역별 입양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입양 가족들간의 정보교류 및 멘토 역할과 교회 유휴시설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여 입양공동체를 형성합니다. 특히 TV와 뉴미디어를 통한 공익 광고와 함께 TV 스포츠 광고, APP, SNS,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입양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시행과 함께 한국교회가 범교단적으로 연합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상설기구로 생명존중운동본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생명존중 기독교 NGO 연대의 조직화(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한 각 교단 내 기독교 NGO를 연대하여 공동정책수립과 대정부, 대국회와 정책 사업을 공유하여 전국화 시키고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여, 생명존중운동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모든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가는 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한국교회의 책임과 역할”(2014.5.7. 크리스찬투데이)

장헌일 원장/행정학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명지대 객원교수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세월호 침몰 사건은 철저히 인간의 탐욕이 저지른 인재로, 무능한 정부와 부정부패로 가득 찬 대한민국의 현주소이자 무기력한 한국교회의 공공신학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한국교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추구하고 개교회 성장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공공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처럼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사회 깊숙이 독버섯처럼 활개치는 것을 막지 못해 오히려 사회적 공범으로 세상에 악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신학의 깊은 연구와 실천이 시급하다. 적어도 여러 교단 교파들이

오늘의 공공정책 이슈들을 함께 풀어 나가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무엇보다 공공신학에 대한 담론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다. 교회는 교회 내에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을 향하여 책임적 대안을 줄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사적 영역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그리고 다원화된 세계에서의 윤리적 문제 등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회가 여기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신앙의 영역을 넘어 공공의 영역에서도 주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이다.

디트리히 본회퍼(D. Bonhoeffer)의 지적처럼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비로소 교회이다. 그는 교회 존재의 근거를 철저하게 교회의 사회성에서 찾고 있다. 교회는 모든 직업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이며,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세상과 사회를 위한 공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공공정책 실행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태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국교회와 공공신학의 책임적 실천에 참여하는 일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회복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아 회개·기도 운동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교단과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물신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 교회 연합과 일치로 방기했고, 양적 성장에만 매몰돼 세상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잘못에 대해, 나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

둘째,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이율배반적인 잘못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한국교회와 성도들 모두 거룩성 회복을 위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결단해야 한다.

셋째,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유가족과 함께 전개해야 한다.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와 '관피아'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내야 하고, 특히 참사의 핵심에 깊게 관여된 구원파 이단 집단의 총체적 먹이 사슬을 비롯한 비리와 선장과 선원들, 해운사, 해경 및 해수부 등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고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넷째, 국회와 정부는 가정파괴와 재산 착취,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며 돈과 권력이 결탁한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사이비 이단 집단을 규제하는 '사이비이단 규제법'을 급히 제정해야 한다.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들을 제대로 조사하여 이들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단호한 법 집행만 했어도 세월호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 큰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사이비 이단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전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경악하며 애통해 하는 이번 참사에,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파멸로 이끄는 구원파 이단이 연루된 사실을 주목하며, 다시는 사이비 이단들이 사회 혼란을 야기 시키지 못하게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세워야 한다.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공공신학을 통해 공적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교회의 양적 성장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지역과 계층, 문화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삶에서 실천되는 참된 제자화가 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호 침몰을 목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교회의 거룩성 회복, 그리고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균형된 복음을 통해 국가의 공공정책에 관한 무한 책임을 인식하고,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깊은 성찰과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불교계의 종교평화법 제정 촉구에 대하여(2014.7.20,기독일보)

장현일 원장/행정학박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

우리처럼 다종교사회에서 여러 종교가 공존하며 국민통합에 기여한 곳이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소위 종교평화법 제정을 운운하며, 오히려 국민 통합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보여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 7월 4일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 불교사원에서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이 이른바 ‘땅밟기’라는 행위를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특히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종교인 기자회견에서, 불교계는 7월 17일 성명을 통해 한국 사회 내의 종교 간 공존과 종교활동에 매진하는 일반 신자들의 행동 양식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믿는 종교에 대한 차별과 개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종교평화법은 물론, 나아가 동성애까지 받아들이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마디로 법률 제정을 통해 종교 간 공존과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경도된 신앙논리로 ‘무례한 기독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일방적인 선교행위를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 스스로 이런 문제들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타문화를 존중·배려하는 성숙한 선교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사건을 악용하여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과 종교 외에 타종교인에게는 일체의 선교행위를 할 수 없게 해, 종교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제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과연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가? 단언컨대 종교평화법은 종교 간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쟁 요소를 증폭시킬 뿐이다. 그 기저(基底)에는 기독교의 선교를 차단하자는 복선이 깔려 있다. 이는 악법이자 위헌적 발상이다.

우리는 그동안 제기되던 불교계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문제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종교평화법 제정을 주장하는 그 동기와 배경의 문제점이다.

불교계는 오래 전부터 종교평화법 제정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의 캠프에 불교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면서 종교평화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필자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기독교 공공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불교계의 종교평화법 제정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한 바 있다. 불교계는 이번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원 사건을 기회로 다시 종교평화법 제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우선 법률 제정을 주장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종교평화법의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교회연문회의 지적처럼 이 법은 2010년 12월 20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증오범죄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이 시점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이명박 정부 때 정부와 국회가 국민 분열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배타적이며 몰지각한 종교인의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는 증오(혐오)범죄법을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그 배경이다.

결국 종교평화법은 기독교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불교계의 의도가 강하게 내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증오범죄법을 종교평화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입법 제안을 한 것은, 외형적으로는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에 따른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입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불교계의 정치권에 대한 개입, 영향력 확대 및 기독교 선교에 대한 차단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 총선 과정에

서 불교신문이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들에게 종교평화법에 대한 질문과 함께 법률 제정을 수용할 것을 요청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둘째, 종교평화법 제정 의도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발상이다.

헌법 제20조 2항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어떤 종교를 특별히 보호하거나 특권을 부여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할 자유를 말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세속적(世俗的)·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일이지 국민의 신앙적·내면적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국가는 각 개인의 종교활동, 즉 신앙생활을 인위적(법)으로 제한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며, 자기의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평화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종교평화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종교자유와 일환으로 보장되는 선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 권력이 종교를 간섭하는 것이 된다. 이 법을 통해 특정종교를 우대 또는 차별하기 위한 정책수립 내지 정치활동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헌적이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란 신앙의 자유와 신앙 실행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신앙 실행의 자유는 종교 의식의 자유, 종교 선전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해당된다. 종교 선전(포교 또는 선교)의 자유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동조자를 규합하기 위한 적극적 신앙의 실천행위다. 순수한 교리적 방법으로 타 종교를 비판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는 자유도 포함된다.

무엇보다 법학자들은 종교평화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대표적 사례로 종교자유 및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와 평등 원칙 위배, 그리고 종교의 자정기능 상실 및 특정 종교의 세력 확보 수단의 변질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가 이런 것을 법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기독교의 세력 확산을 막아보자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종교평화법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각자의 종교에 대한 절대 신념이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종교 갈등, 특히 불교와 기독교와의 갈등은 기독교의 배타적인 교리에서 발원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불교계는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기독교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마다 종교편향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각종 이득을 취해 왔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기독교의 개인과 단체의 고유한 신앙행위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다. 오히려 불교계의 이러한 태도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종교평화법은 불교의 기독교 견제의 절정인 셈이다. 기독교가 포교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리자는 의도가 담긴 악법이다.

불교계는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이 불교 폄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을 내세워, 마치 기독교 전체가 불교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이를 기독교 억제책의 일환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불교계는 그것을 빌미로 기독교의 절대적 가치나 개인의 신앙생활까지 간섭하려 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 학교이다. 학교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제할 권한은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박정희 정권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기독교 학교의 운영자율권이 박탈당한 상태이다. 거기다 기독교 사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일반 공립학교처럼 무종교성을 강요하는 입법을 불교계의 요구로 반영시켰다. 불교계의 기독교 기관에 대한 규제는 기독교 교도소에 대한 조계종의 압력, 국가조찬기도회 폐지 주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기독교계 학교와 기관들을 감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을 준 것 등이 대표적이다.

종교평화법은 한국에서 기독교가 더 이상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불교계의 전략임을 이렇듯 쉽게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불교는 전통문화재 보호라는 명분으로 사찰을 보수하거나 증축하고, 또 연등

회 같은 각종 불교 행사에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심으로 문제 삼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항의도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한데도 불교계가 종교편향이라는 합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 기독교의 정상적 종교활동마저 방해하고 제지하려는 것은, 오히려 종교 간의 공존과 상생을 파괴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종교평화법 제정은 사이비 이단들을 또 다른 종교로 인정하게 되며, 반사회적·반도덕적인 행태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보호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상적 기독교 활동을 위축시킬 경우, 그 공간을 사이비 이단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차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청난 사회악을 가져 올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구원과는 사이비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종교탄압을 주장하는 그들의 행태로 볼때 종교평화법이 제정되면 그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측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단 사이비는 더욱 창궐하고, 반사회·반도덕적 문제는 더욱 확산 될 것이 자명하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평화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의 공존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과 화합을 깨고 갈등만을 더욱 증폭시키는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동시에 기독교계는 다종교사회에서 타 종교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면서도, 국민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악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범교단적으로 종교평화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입법반대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교과를 초월하여 정부와 국민을 향해,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코자 말씀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다. 특히 한국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을 통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교회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회 창립및

“녹색한반도 통일화합나무8천만그루심기 범국민운동본부발대식”

선 언 문

박근혜대통령은 제69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시대적 소명인 통일의 우선 과제로 한반도의 생태계 연결과 복원을 들고 이를 위한 환경협력 통로를 조성하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실천하자고 북한에 제안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 오면서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한반도의 생태환경의 보전과 유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우려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어 북한 산림의 회복을 시급한 민족적 과제로 정하고 ‘**녹색한반도 통일화합나무 8천만그루심기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백두산과 묘향산 등 명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에는 거의 나무가 없을 정도로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심각한 형편입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체 산림면적의 31%를 잃었으며 매년 평양시의 면적만큼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한반도 사진을 보면 남북한 산림녹화의 정도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북한 산림면적의 감소는 한반도 전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의 약화를 의미하며, 하나로 연결된 남북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긴장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곧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한반도는 남과 북,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 모두의 것이며 산림의 회복은 생명의 회복이요, 삶의 회복이요, 한민족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북한 나무심기 사업은 1999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5.24조치 이후 남

북관계가 더욱 소원하여져서 협력이 증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화합나무심기 범국민운동을 통해 남북한이 서로 소통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교회는 범교단적으로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통일화합나무로 녹색한반도를 만들자”라는 슬로건 아래 전 국민이 녹색한반도를 꿈꾸며 통일의 그날까지 한반도 전역에 통일과 화합의 8천만그루 나무를 심고자 하며 그 염원과 의지를 모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녹색한반도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교회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회를 창립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선언합니다.

첫째, 한반도는 환경 공동체로서 하나입니다. 「녹색한반도 통일화합나무 8천만그루 나무심기 범국민운동본부」는 녹색 생명과 평화를 고양시키는 희망과 사랑의 한반도 그린프로젝트이며 북한에는 푸른숲 조성을, 한국기업들에게는 탄소배출권이 주어지는 남북 상생의 경제협업이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은 남북 대립을 극복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귀중한 씨앗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둘째, 녹색한반도 프로젝트가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시키고 기후변화 대응, 식량 및 에너지 지원 등과 잘 연계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녹색한반도를 푸르게 가꾸기 위해 한국교회 성도와 전 국민 그리고 해외동포 1인 2그루나무를 3년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는 통일화합나무123범국민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사업이 한반도 우리 겨레의 생명자원이 되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씨앗이 되어 화해와 평화의 기초를 세우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제 NGO단체들을 비롯한 국내 NGO단체 그리고 전문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녹색한반도 프로젝트를 추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녹색한반도 통일화합나무 8천만그루심기 범국민운동**을 범교단적으로,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일에 한국교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해외동포를 포함하여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126:6)

2014년 9월 18일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 | | |
|-------------------------|------------------------|
|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총회(김탁기 총회장), | 기독교대한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 |
|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이신웅 총회장),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이영훈 총회장) |
|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김대현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신(최순영 총회장) |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피어선(김희신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김동엽 총회장) |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안명환 총회장) |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이종복총회장) |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박동일 총회장) |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현일원장) |

* 가나다 순

